■ 민족문화연구 제108호(2025.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57-188.
http://doi.org/10.17948/kcs.2025..108.157

한국전쟁기 '1도 1교 방침'과 국립대학교 후원재단 설립*

이지완(李智婉)**

목 차

1. 머리말
2. '1도 1교 방침': 난립하는 대학의 통폐합
3. 국립대학교 후원재단의 설립 과정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전쟁기 문교부의 '1도 1교 방침'의 결과로 탄생한 국립종합대학인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의 설립 과정을 재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문교부는 정부 수립 직후부터 재단과 시설이 미비한 사립대학을 정리하여 지역적·학과 계통적 편중을 조정하고자 했다. 한국전쟁기 각 지역에 국립대학교를 설치하여 기존 대학을 흡수하는 1도 1교 방침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발현이었다. 또한 이 시기 1도 1교 방침은 문교부와 각 지역 행위자들 간의 상호 교섭 속에 나온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문교부의 1도 1교 방침은 기설된 사립대학 및 그 재단을 국립대학교 후원재단으로 포섭하여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렇기에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가 설립되는 과정은 주체들의 행위과 선택이 교차하며 만들어 낸 지역의 고유한 동학에 좌우되었다.

주제어: 1도 1교 방침, 국립대학교 후원재단,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시연합대학

* 본고는 2025년 6월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 분과총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귀중하고 세심한 토론을 해 주신 김일환 선생님과 이후 심사 과정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본고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내용은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성균관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1. 머리말

한국의 고등교육이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팽창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방 직후부터 사립대학은 전체 대학의 70% 이상을 점해왔고, 고등교육은 재정적으로도 사적 부담에 의존해왔다.[1] 이런 점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사립대학에 집중되었던 것도 일견 자연스러웠다.[2] 이에 비해 국공립대학이 밟아온 역사적 경로에 관한 연구는 미군정기 국립서울대학교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국대안 파동'에 대한 연구사를 제외하면 거의 미개척의 영역이다.[3] 서울대 이외에 각 지역 거점 국공립대학은 한국전쟁기 문교부의 '1도 1교 국공립대학교 설치 방침'(이하 '1도 1교 방침')하에 탄생했다고 언급되어 온 정도이다.

그런데 1도 1교 방침을 토대로 각 지역 국립대학교[4]가 개교한 시점이 한국전쟁의 와중이던 1952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재정적 토대가 무엇이었는지는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전쟁이 발발하며 정부 전체 예산 대비 문교부 소관 예산 비중이 약 10%에서 3.5% 이하로 급감했고, 그마저도 가장 시급한 초등교육비에 우선적으로 할당되었기 때문이다.[5] 그렇다면 문교부는 어째서 이 시기에 각 지역에 국립대학교를 설립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육10년사』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강명숙, 『미군정기 고등교육 연구』,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66-74면; 김기석, 「만민고등교육의 구현, 1948-2007」, 『한국 고등교육 연구』, 교육과학사, 2008; 박환보, 「한국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상 분석」, 서울대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등.

2) 예컨대 해방 이후 한국의 고등교육이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온 과정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강명숙, 같은 글, 3장 2절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확대」; 이지원, 「미군정기 한국 사립대학 설립의 사회적 조건들 : 국가 정책과 자원 동원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김정인, 『대학과 권력』, 휴머니스트, 2018, 2부 「사학주도 대학권력의 형성」; 김일환, 『한국 사립대학체제의 형성과 재단법인의 정치』,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3) 또한 미군정기 교육계 갈등의 집약으로서 국대안 파동을 조명한 연구는 많지만, 그것이 이후 국공립대학 모델에 어떤 흔적과 유산을 남겼는지는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4) 당시 「교육법」은 대학을 초급대학, 대학(단과), 대학교(종합)로 구분했다. 이하 본문에서 등장하는 '대학교' 혹은 '국립대학교'라는 용어는 모두 종합대학을 의미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5) 문교부, 『단기 4290년도 문교행정통계일람』, 1957, 706-709면.

> 1도 1교의 국공립대학 설치 방침은 당해 지방의 다대한 관심을 집중시키어 후원재단의 조직, 시설 기금의 조달 등 그 열의를 이용함에 적합한 계획이었으므로 사립대학의 설립을 조장함보다는 1도 1교의 국공립대학교를 설치함이 비교적 국고 부담을 과중히 하지 않고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사료하였던 것이다.[6]

위의 서술은 당시 문교부의 1도 1교 방침을 뒷받침한 재원 조달 구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문교부는 대학 설립을 향한 지역의 관심과 열의를 모으면 국가에서 비용을 무리하게 부담하지 않고도 국립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민간의 열의를 집중시키는 기관으로 '후원재단'이 제시되었다.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한국 사립대학 체제가 뿌리내려온 과정을 살핀 김일환의 연구에 따르면, '재단법인형 사립대학'은 국가가 공적 재정지출을 제한하며 민간 자본을 동원하고 관리해 온 과정에서 등장한 역사적 산물이었다.[7] 그런데 문교부가 1도 1교 방침을 고안한 이유 중 하나가 "국고 부담을 과중히 하지 않고"도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한국교육10년사』의 서술은 사립뿐 아니라 국공립대학 설립 과정에서도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의 자원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국립과 공립, 그리고 사립의 경계가 오늘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변적인 것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국 고등교육이 성장해 온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국공립대학의 과거와 현재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 국공립대학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한국전쟁기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8] 특히 전국 각지의 전시연합대학을 구체적으로 살핀 윤해동의 연구는 전시연합대학의 경험이 지역 국공립대학 설립에 직접적

---

6) 한국교육10년사간행회, 『한국교육10년사』, 풍문사, 1960, 154면.
7) 김일환, 앞의 글, 323면.
8) 손인수, 「한국동란 중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2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5; 연정은, 「전시연합대학과 학원통제」, 『사림』 24, 수선사학회, 2005; 박선영·김회용, 「한국전쟁기 대학상황의 이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 윤해동, 「네트워크로서의 대학, 전시연합대학」, 『사회와 역사』 142, 한국사회사학회, 2024.

인 매개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전시연합대학 자체가 그 이전의 '종합국립대학 설립 운동'에 탄력을 받아 설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9] 다만 그의 주장은 전시연합대학의 경험과 국공립대학 설립의 관련성을 시론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이기에 양자의 연결고리는 구체적인 사료를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 특정 지역 국립대학교 설립 과정에 집중한 연구들이 있는데, 해방 이후 부산 지역의 대학 설립 동향을 다룬 이종길의 논문과 전북대학교 설립 과정에 주목한 장순순의 논문이 이에 해당한다.[10] 이 가운데 장순순의 논문은 미군정기 공포된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이 이후 지역 국립대학교 설립에 향교재산이 활용될 근거가 되었음을 점을 지적하며 그 사례로서 전북대학교 설립 과정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향교재단 관련 문서철을 토대로 전북향교재단이 세운 전주 명륜대학이 전북대학교로 통합되고, 그 재산이 이관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전북향교재단 내부의 이사회와 평의원회 간 갈등을 포착했는데, 이는 '재단법인의 정치'라는 시각에서 이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11]

앞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연구사 정리를 토대로 하여, 본고는 1950년대 문교부의 1도 1교 방침의 결과로 탄생한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의 설립 과정에 주목한다. 특히 본고는 국립대학교 설립 과정에서 민간의 자원이 동원된 방식에 집중하며, 그것을 각 대학교 후원재단 설립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국립대학교보다도 국립대학교 후원재단이 설치된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국고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국립대학을 설립한다는 한국전쟁기 1도 1교 방침의 독특한 구상과 이후 국립대학교가 각 지역 주체들의 협력과 갈등 속에서 탄생한 과정이 '국립대학교 후원재단'을 통해 잘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2]

---

9) 윤해동, 같은 글, 201-203면.

10) 이종길, 「해방 후 부산지역의 대학설립과 동아대학 창학 및 법학교육의 전개」, 『동아법학』 85,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장순순, 「해방 이후 향교재산관리와 지방 국립종합대학교의 설립-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84,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5.

11) '재단법인의 정치'란 재단을 고정된 법적 실체라기보다는 여러 행위자가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며 갈등하고 경합하는 장(field)으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다음을 참조. 김일환, 앞의 글, 37-42면.

연구 대상을 세 학교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부언하자면, 부산대학교는 이미 미군정기에 설립된 이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1도 1교 방침의 결과로 탄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충남대, 제주대, 충북대 등의 도립대학도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1950년대 국공립대학에 관한 연구가 거의 축적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립대학교 설립 과정에 대한 조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2. '1도 1교 방침': 난립하는 대학의 통폐합

1) 문교부의 '1도 1교 방침'과 각 지역과의 교섭

한국전쟁의 와중이던 1951년 9월 14일, 문교부가 상정한 〈경북, 전북, 전남의 국립대학교 설립안〉(이하 '〈설립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당시 〈설립안〉에 담긴 국립대학교 설치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 1.설치의 취지
> (1) 대학교육기관의 대다수(전국대학의 3분지2)가 수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집중된 사립대학 중에는 재단과 시설이 불비하던 차에 금차(今次)의 농지개혁과 전화로 인하여 그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대학이 불소(不少)하므로 이를 정비함과 동시에 지방 분산을 계책함
> (2) 여상(如上)의 사립대학은 거개가 법문계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경북의 과수, 전북의 제지, 공예 및 전남의 방직 등의 지방 특색을 고려하여 실업계 대학의 확충을 도모함
> (3) 대학의 무계획적 난립을 방지하고 학과의 균형을 가추어 1도 1교의 목표로 국립대학교를 설치코저 함

12) 본고는 국가기록원에서 소장 중인 각 국립대학교 후원재단 문서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여기에는 후원재단 설립 허가 신청 시 문교부에 보고한 기본재산 현황, 임원 후보자 및 최종 임원 명단, 후원재단 설립위원회 회의록, 후원재단 설립에 참여한 지역 향교재단 회의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각 국립대학교 후원재단 설립에 참여한 지역 주체들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4) 종합대학교의 실현으로 인하여 부족된 인적 자원의 활용과 아울러 시설 및 도서의 공동 사용을 기함
(하략)[13]

위 설치 취지에서 당시 고등교육기관 상황에 대한 문교부의 진단을 엿볼 수 있다. 문교부는 대학들이 지역적으로 서울에 편중되어 있고 학과 역시 법문계에 편중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해야 할 문제로 인식했다. 〈설립안〉에 따르면 이러한 편중의 근원에는 사립대학의 '무계획적 난립'이 자리하고 있었다. 애초에 '재단과 시설이 불비'했던 많은 사립대학이 농지개혁의 실시와 전쟁의 발발로 더욱 타격을 입고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설립안〉은 각 지역에 국립대학교를 설치하여 난립한 대학을 흡수하는 것을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는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제까지 문교부의 1도 1교 방침은 주로 전시연합대학의 경험에서 설명되어 왔다. 문교부는 한국전쟁 중 전시연합대학을 설치 운영하며 고등교육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 결과가 바로 '1도 1교 방침'이었다는 것이다.[14] 그런데 1도 1교 방침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전시연합대학 경험에 더해, 한국전쟁 이전부터 문교부가 고민해 온 고등교육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주목되는 자료가 1949년에 문교부가 발간한 『대한민국교육개황』이다. 이에 따르면 해방 이전에 교육의 기회는 크게 제약되었고, 대학 설립은 '일본의 압정' 속에서 불허되었다. 미군정기에 고등교육기관이 양적으로 팽창한 것은 그에 대한 반발로 이해되었다.[15]

해방 전후(前後) 고등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에서, 문교부는 정부 수립 이후 고등교육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방침을 설정했다. 즉 "해방 후부터 대

13)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51, 〈국무회의 부의사항(경북,전북,전남 국립대학교(종합대학교) 설치에 관한 건)〉, 《국무회의상정안건철》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4187)
14)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45년사: 1947-1992』, 전북대학교, 1992, 68면; 경북대학교오십년사 편찬위원회, 『경북대학교 50년사: 1946-1996』, 경북대학교출판부, 1996, 45면; 전남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전남대학교 50년사: 1952-2002』, 전남대학교, 2002, 36면; 김종철, 『한국고등교육연구』, 배영사, 1979, 64-65면; 김정인, 앞의 책, 2018, 108-109면 등.
15) 문교부, 『대한민국교육개황』, 1949, 13-17면.

한민국 수립 시까지를 고등교육의 확장 시대라고 보면 대한민국 수립 후는 질적 향상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방 직후 미군정기에는 대학의 양적 확장에 방점을 두었기에 더 많은 학생에게 대학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었으나, 그 결과 "현 고등교육기관이 시설, 교과용 도서 교사 등의 각 방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계 수준에 비하여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 수립 이후에는 "대학의 신설을 가급적 억제하고 기설 대학의 내용 충실을 도모"해야 했다.[16] 이러한 판단의 말미에 문교부는 다음과 같은 장래 계획을 제시했다.

> 1) 대학 수나 단과대학에 있어서 설비 시설이 완전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는 대학원을 설치하여 교수 및 학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
> 2) 대학의 도시 집중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대학교육기관을 분산시켜 지방문화 발전과 교육기회 균등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다.
> 3) 과거 3·7(인문계통3·자연과학계통7)의 교육기관 설치 원칙을 견지하여 앞으로 자연과학계통 대학설치에 치중하며 특히 공업계통대학 설치와 기설 공과대학 내용 확충에 주력하기로 하겠다.
> (하략)[17]

위 계획은 문교부가 대학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 대학의 부실한 질을 관리하며, 지역적·학과 계통적 편중을 조정하는 것을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주요한 과제로 설정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1도 1교 방침에 깔려있었던 문제의식은 정부 수립 직후부터 문교부가 설정한 고등교육 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었다. 정리하면, 문교부는 정부 수립 직후부터 대학의 편중과 부실한 수준을 고민하고 있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한국전쟁기 통폐합을 통한 지역 국립대학교 설치였다.

그런데 1도 1교 방침은 각 지역 국공립대학 및 지역 당국의 이해관계와도 상당 부분 부합했으며, 문교부와 지역의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연계와 사전 교섭 속에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전남대학교 설립에서 주도적인

16) 같은 책, 18면.
17) 같은 책, 20면.

역할을 했던 전남 도지사 이을식(李乙植)의 전기에 따르면 국립 전남대학교를 설립하자는 논의는 오히려 각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 국립 전남대학교를 설립하자는 논의는 52년 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 당시 전남에는 도립대학으로 광주의대와 목포상대가 있었고, 사립대학으로는 조선대학과 대성대학이 광주에 있었다.
>
> 이 가운데 조선대학은 재단이 제법 기틀을 잡아 박철웅 학장이 학교 발전을 위해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3개 대학은 전란에 따른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운영상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다. (중략) [이을식] 선생과 최상채 광주의대 학장이 수십 차례에 걸쳐 외국기관 및 문교부에 시설 확충을 요청했으나, 문교부 자체에 지방대학을 도울 만한 예산이 없어서 크게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이었다.
>
> 이런 상황에서 도내 지방유지들이 지사실에 들를 적마다 이구동성으로 국립대학 이야기를 꺼냈다. 전남에 있는 각 도립대학을 하나로 합쳐 차라리 국립대학으로 발족시켜 놓으면, 정부에서 예산으로 반영시키기가 쉽고, 더 나아가 외국기관의 도움도 클 것이라는 견해였다.(대괄호, 밑줄-인용자)[18]

특정 개인의 입장에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전기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다. 1952년 봄부터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거나, 전남도 지역 유지들이 국립대학 설립을 먼저 제안했다는 내용 등은 교차 검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위 서술은 문교부의 1도 1교 방침이 각 도립대학 책임자, 도지사와 문정과장 등 지역 관료와 지역 유지 입장에서 충분히 반길만한 계획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황은 전북과 경북에서도 발견된다. 전북전시연합대학 운영위원회에서는 1951년 4월 19일에 김가전(金嘉全) 전북 도지사가 대학교 설립에 대해 제언했고, 이후 5월 8일에는 전북 유지 및 교육계 인사들이 전북에 와 있던 김두헌(金斗憲) 문교부 고등교육국장과 만나 대학교 설립 문제를 논의했다.[19] 나아가 국무회의에서 〈설립안〉이 가결되기 3달 전인 1951년 6월 1일에 이미 종합대학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필요한 기금 확보 방안을

18) 죽헌이을식선생 전기발간위원회, 『청빈의 외길』, 고려서적, 1999, 120-121면.
19) 전북대학교, 앞의 책, 68면.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20] 경북에서도 문교부가 국무회의에 〈설립안〉을 부의하기 약 5개월 전인 1951년 4월에 대구 4개 대학 학장들(고병간(高秉幹) 대구의과대학장, 손계술(孫癸述) 대구사범대학장, 김인식(金仁植) 대구농과대학장, 이규원(李圭元) 대구대학장)이 발기인이 되어 국립대학교 건설위원회가 구성되었다.[21]

이는 1도 1교 방침이 한국전쟁의 와중에 문교부와 각 지역 주체들 간의 사전 교섭 속에 나온 산물임을 방증한다. 문교부가 국무회의에 〈설립안〉을 상정한 1951년 9월은 이미 지역에서 국립대학교에 흡수될 대학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설립 준비가 진행되던 시점이었다. 그렇다면 각 지역 주체들은 어째서 1도 1교 방침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선행 연구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전쟁 중 연합대학을 운영한 경험이 종합대학 설립에 촉매제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경북에서는 그 이전 미군정기에도 지역 종합대학 설립 운동이 진행된 바 있었다.[22]

또한 이을식의 전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당시 전화를 입은 각 지역 도립대학은 국가의 보조나 외국의 원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국립으로 전환 시 그러한 혜택의 가능성이 커지리라 기대했던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여러 초급대학(도립 광주초급농과대학, 도립 목포초급상과대학, 사립 명륜대학 등)이 이전부터 대학으로 승격 운동을 전개해 오던 상황이었고, 국립대학교로 편입되는 것은 대학 승격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에, 초급대학 입장에서는 편입의 이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23]

---

20) 같은 책, 68-70면.
21) 경북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5면.
22) 같은 책, 44-45면; 영남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영남대학교 50년사: 1947~1997』, 영남대학교, 1996, 75-79면. 다만 미군정기 지역의 종합대학 설립 운동 경험이 한국전쟁기 국립대학교 설립을 촉진했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후술하겠지만, 경북에서 미군정기 종합대학 설립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사립 대구대학은 결국 경북대학교 설립에 참여하지 않기로 입장을 변경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23) 전남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28-31면.

2) 민간 재단을 활용한 국립대학교 후원재단 설치

문제는 국립대학교 설립에 요구되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도 1교 방침은 국립대학교의 설립 주체인 문교부의 소관 예산이 급감한 한국전쟁기에 등장했다. 이런 시기에 각 지역 국립대학교 신설에 드는 재원은 어떻게 설정되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앞서 인용한 전남 도지사 이을식 전기의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이 등장한다.

> [이을식] 선생 역시 이 같은 이야기가 그럴듯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최병수 문정과장을 불러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물어봤다.
>
> "네, 그 문제 때문에 구체적인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재작년에 종합대학을 만들려고 기성회까지 구성했다가 중간에 좌절됐었습니다. 앞으로 기성회가 조직되더라도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는 종합대학 설립 가능성이 아주 희박할 것입니다."
>
> "아니, 기성회까지 만들었다면서 도중 좌절된 이유가 무엇이오?"
>
> "네, 그것은 대체로 두어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한가지는 우선 기금 조성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그때 각 시군에 통보해서 지방 유지들로부터 모금을 시도했으나 뜻대로 안 된 것이지요. 또 하나는 각 행정기관에서부터 예산이 절대적으로 달려, 기성회가 움직이는 데 어떤 결정적인 협력을 해 주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 "그래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
> 선생이 무심코 내뱉은 걱정스런 말에 최 과장은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대답했다.
>
> "실은 기성회를 만든 뒤에 전남 향교재단과 연락해서 향교재단의 농지증권을 기부받는 방법이 결정적인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
> 최 과장의 이 말에 선뜻 용기가 생긴 선생은 그 자리에서 종합대학교 설립기성회를 다시 조직하는 것이 전후 교육의 재건 상 꼭 필요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즉각 각급 기관장과 유지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대괄호, 밑줄-인용자)[24]

위 인용문에 따르면, 전남 당국 차원에서 국립대학교 설립은 재정적인 난관에 봉착했다. 행정기관의 예산 부족과 지역의 저조한 모금 성적은 대학교

24) 죽헌이을식선생 전기발간위원회, 앞의 책, 1999, 121-122면.

설립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다. 눈여겨 볼 구절은 대학교 설립 재원으로 '지역 향교재단의 농지증권'을 지목한 부분이다. 이처럼 향교재단을 비롯한 민간의 자원을 이용한다는 발상은 문교부의 1도 1교 방침에도 그대로 구현되었다. 이는 문교부의 〈설립안〉에서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 1. 설치의 취지
> (중략)
> (5) 종래 사립대학을 운영하던 재단과 3도 향교재단 기본재산의 각각 5할 정도로써 종합대학교 후원재단을 구성케 하고 그 수익과 종래의 도비 부담금 및 국고부담금을 합산하여 운영하면 소액의 국고 부담으로 대학교육기관의 충실을 기할 수 있음(밑줄-인용자)[25]

문교부는 이전에 사립대학을 운영해온 재단과 각 도 향교재단의 기본재산을 활용해 대학교 후원재단을 구성하면 "소액의 국고 부담으로" 국립대학교의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원 조달을 담당할 기관으로 설정된 후원재단은 그 이전까지 각 학교를 후원하기 위해 학부형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던 후원회와는 다른 조직이었다.[26]

문교부 고등교육국장을 역임하고 이후 전북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부임한 김두헌은 두 기관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전북대학교 총장으로서 전북대학교 후원재단 이사들에게 "후원재단은 후원회와 성질이 달라 사립대학을 유지 육성하는 의도로써 협력하여 주시어야 하겠으며", "후원재단은 지방 학부형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사명이 있으니만치 속히 활발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달한 바 있었다.[27] 이런 점에서 1도 1교 방침에 등장한 국립대학교 후원재단은 마치 사립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립대학 재단처럼, 국립대학교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별도의 재단법인

25)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앞의 문서.
26) 1950년대 사립대학은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형에게 각종 명목의 비용을 징수하고는 했다. 학부형을 중심으로 후원회를 설치하여 그들에게 후원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 김정인, 앞의 책, 110면.
27) 〈1952. 9. 9. 후원재단 이사회 회의록〉, 전북대학교, 앞의 책, 1992, 78면에서 재인용.

이었다.

〈표 1〉 1952년도 신설 종합대학교 세입 예산표

교명	세입(재원)			
	학생수입	재단수입	국고부담	계
경북대	75,400,000 (24.7%)	139,414,200 (45.7%)	90,000,000 (29.5%)	304,814,200 (100%)
전북대	72,200,000 (12.8%)	240,065,300 (42.6%)	250,000,000 (44.4%)	562,265,300 (100%)
전남대	45,140,000 (8.6%)	256,280,400 (49.1%)	220,000,000 (42.1%)	521,420,400 (100%)
계	192,740,000 (13.8%)	635,759,900 (45.7%)	560,000,000 (40.3%)	1388,499,900 (100%)

* 출처: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51, 〈국무회의 부의사항(경북,전북,전남 국립대학교(종합대학교) 설치에 관한 건)〉, 《국무회의상정안건철》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4187)

문교부의 〈설립안〉에는 신설될 지역 국립대학교 예산안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르면 학교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주체는 학생, 재단, 국가로 설정되었다. 각 대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단은 40-50%가량을 차지하며 운영비의 절반 가까이 조달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28] 이 정도의 부담은 당대 사립대학 재단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이었다. 1950년대 사립대학 운영 경비에서 설립자인 재단이 부담하는 비중은 오히려 20% 안팎이었기 때문이다.[29]

28) 다만 〈설립안〉에 제시된 세 지역의 국립대학교 재정 조달 방안은 어디까지나 학교가 설립되기 전에 문교부가 상정한 예산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예산안은 국가가 국립대학교에 전면적인 재정지원을 보장하지 못하던 시점에 부족한 비용을 민간 주체들에게 어느 정도로 분담시킬 계획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구상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현실화되었는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29) 김일환, 앞의 글, 204면.

〈표 2〉 각 지역 국립대학교 및 후원재단 설치 방법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국립대학교	국립대구사범학교+국립대구농과대학+도립대구의과대학+사립대구대학	도립이리농과대학+명륜대학+군산대학관+이리고등공업학교	도립광주의과대학+도립광주농과초급대학+도립목포상과초급대학+대성대학관
후원재단	사립대구대학 재단법인	전북향교재단+재단법인 동지학숙	재단법인 대성의숙+전남향교재단

* 출처: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51, 〈국무회의 부의사항(경북,전북,전남 국립대학교(종합대학교) 설치에 관한 건)〉, 《국무회의상정안건철》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4187) 이 표는 해당 문서에 제시된 각 지역 종합대학교 '설치 방법'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 이리고등공업학교는 그 시설을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으로 이용.

위 표는 〈설립안〉에 제시된 각 지역 국립대학교와 그 후원재단 설치 계획이다. 전북에서는 각각 사립 명륜대학과 사립 군산대학관을 설립·운영해 온 전북향교재단과 재단법인 동지학숙을 토대로 전북대학교 후원재단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전남에서는 사립 대성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있었던 전남향교재단과 재단법인 대성의숙을 바탕으로 전남대학교 후원재단이 설치될 것이었다. 호남 지역 향교재단과 달리 경북향교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한 바가 없었기에, 사립 대구대학을 운영해온 대구대학 재단법인이 후원재단의 토대로 설정되었다. 종합하면, 국립대학교 운영 경비의 절반 가까이 되는 액수를 부담할 후원재단은 각 도 향교재단을 비롯한 사립대학 재단을 바탕으로 설치될 계획이었다.

식민지기 「향교재산관리규칙」하에서 관의 감독 속에 운영되었던 향교 재산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 관의 통제에 놓여있는 상황이었다. 1948년 5월 17일에 군정법령 제194호로 공포된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은 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향교 재산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용 기구를 기본재산으로 설정했으며, 향교재단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①성균관 및 성균관 대학의 유지, ②도내 각 문묘의 유지 ③교육 기타 교화 사업의 경영 이

외에는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재산 목록을 소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문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했다. 향교재단을 운영하는 이사는 각 향교의 유림 대표 7-15명을 선정하며, 이사 한 명은 도지사가 추천한 도 공무원으로 해야 했다.[30]

이처럼 해방 이후 문교부는 도별로 향교재단을 구성하게 하여 전국의 향교 재산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었다.[31]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과 전북의 향교재단은 각각 사립 대성대학과 사립 명륜대학을 설립·운영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각 지역의 향교재단을 비롯한 민간 재단은 문교부의 '1도 1교 방침'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다음 장에서는 각 국립대학교 후원재단 설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살필 것이다.

3. 국립대학교 후원재단의 설립 과정

본 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문교부의 1도 1교 방침을 염두에 두고,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각 대학교 후원재단 문서를 주요 자료로 하여 세 지역에서 국립대학교와 후원재단이 설립된 과정을 재구성할 것이다. 그 과정은 지역별로 고유한 양상을 보였고, 여러 주체의 행위와 선택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맞물리며 상이한 결과가 연출되었다.

1) 전북대학교 후원재단: 전북향교재단의 주도권과 지역 간 경합

전북대학교 및 그 후원재단 설립 과정에서 단연 돋보였던 주체는 전북향교재단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북대학교의 학교사에 따르면 1951년 전북전시연합대학 운영위원회에서 김가전 전북 도지사가 종합대학 설립을 제언한 것은 4월 19일이었다. 그런데 그 이전인 4월 6일에 이미 전북향교재단 이사회는 명륜대학을 일환으로 하는 전북종합대학 설치 운동 추진

30)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군정법령 제194호, 1948. 5. 17., 제정).
31) 장순순, 앞의 글, 126면.

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제반 준비와 전북향교재단 재산 일부를 제공할 것을 논의했다.[32]

종합대학 설립을 위해 구성된 전북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에는 도지사가 위원장을, 전북향교재단 이사장인 유직양(柳直養)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유직양을 필두로 한 전북향교재단 측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섰던 데에는 그 직전의 전북전시연합대학 참여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전북전시연합대학은 첫 개강 당시 명륜대학이 쓰던 객사 건물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당시 전북전시연합대학에서도 운영위원장은 김가전 도지사가, 부위원장은 유직양이 맡았다. 여러모로 전북전시연합대학은 "국립전북대학교의 설립을 자극하는 촉진제"가 되었고 전북대학교가 설립되는 과정 역시 그러한 경험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다.[33]

전북향교재단의 적극성은 전북대학교 후원재단 구성에도 반영되었다. 후원재단은 국립대학교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었던 만큼, 재산 구성 과정에서 여러 주체의 기여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각각 전북대학교 후원재단 설립 당시 기본재산 구성과 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지가증권의 기부자별 금액 및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전북대학교 후원재단 설립 당시 기본재산 구성

	지가증권	토지	건물	국채	계
평가액 (단위: 원)	1,317,286,062 (82.5%)	29,833,000 (1.8%)	42,000,000 (2.6%)	206,983,500 12.9%	1,596,102,562 (100%)

* 출처: 문교부 대학정책실 대학행정과, 1962, 〈재단법인전북대학교후원재단 설립허가 신청의 건〉, 《전북대학교후원재단서류철》,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1008)

32) 같은 글, 133면.
33) 전북대학교, 앞의 책, 67면.

〈표 4〉 전북대학교 후원재단 기본재산 중 지가증권 기부자 별 금액 및 기여도

기부자	증권 번호	보상 수량(정조)	기여도
전북향교재단	0081	16,101.60	83.6%
	154121	1,318.00	
	0082	1,318.00	
		18,737.60(소계)	
재단법인 동지학숙	146740	1,772.20	15.8%
	0129	1,772.20	
		3,544.40(소계)	
이리 전길수(田吉秀)	295060	109.40	0.4%
계		22,391.40	100%

* 출처: 문교부 대학정책실 대학행정과, 1962, 〈재단법인전북대학교후원재단 설립허가 신청의 건〉, 《전북대학교후원재단서류철》,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1008)

전북대 후원재단의 기본재산은 크게 지가증권, 토지, 건물, 국채로 구성되었다. 기본재산의 82% 이상을 점했던 지가증권을 기부한 주체는 사립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해 온 전북향교재단과 재단법인 동지학숙, 이리농림학교 출신이었던 전길수였다.[34] 전북향교재단은 보유하고 있던 지가증권의 5할을 내놓았다.[35] 전북향교재단이 기부한 지가증권은 전북대학교 후원재단이 보유한 지가증권 중에서는 83.6%, 지가증권을 포함한 기본재산 전체 가운데는 약 68%를 차지했다.

이처럼 거대한 액수의 지가증권을 기부하면서, 전북향교재단은 신설될 국립대학교와 향교재단 간의 "만세에 영구한 관련"을 도모했다.[36]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전북대학교 후원재단 임원 중 일정 수 이상은 향교재단 추천인을 참여시키고, 후원재단 해산 시 향교재단이 기부한 재산은

34) 이리 농림학교 졸업생이 전북대학교 후원재단에 지가증권을 기부한 것은 도립 이리농과대학이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으로 이관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도립 이리 농과대학은 1922년에 설립된 이리 농림학교를 토대로 했고, 이후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의 모태가 되었다. 후술하겠지만, 전북대학교 설립에는 향교재단뿐 아니라 군산과 이리 지역 유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35) 문교부 대학정책실 대학행정과, 1962, 〈재단법인전북대학교후원재단 설립허가 신청의 건〉, 《전북대학교후원재단서류철》,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1008), '기부증서'

36) 같은 문서, '단기 4285년 4월 15일 회의록(전라북도 향교재단 회의록)'.

향교재단에 환원하며, 전북대학교에서 유도의 진흥과 유학 연구에 노력할 것을 그 조건으로 제시했다.[37]

〈표 5〉 전북대학교 후원재단 설립위원회 추천인 및 최종 확정 임원 명단

향교재단		전주		이리		군산	
이사	감사	이사	감사	이사	감사	이사	감사
유직양 (柳直養)	이준규 (李俊珪)	이우식 (李愚軾)	최만흥 (崔萬興)	도득선 (都得善)	김석준 (金石俊)	서홍선 (徐鴻善)	김판술 (金判述)
유호석 (柳浩錫)		고경선 (高京善)	이긍호 (李兢鎬)	김병기 (金炳琪)	박균학 (朴均鶴)	김용철 (金容喆)	강정준 (姜正俊)
허정렬 (許政烈)		이승용 (李昇龍)		송주섭 (宋周燮)		이종록 (李鍾祿)	
		김영배 (金英培)		김원중 (金元中)		정두현 (丁斗鉉)	
		이양호 (李養浩)		윤택중 (尹宅重)			
		김승태 (金昇泰)		송혜환 (宋慧煥)			
		임종엽 (林鍾燁)					
		송주상 (宋柱祥)					
		최재면 (崔在冕)					

* 출처: 문교부 대학정책실 대학행정과, 1962, 〈재단법인전북대학교후원재단 설립허가 신청의 건〉, 《전북대학교후원재단서류철》,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1008)

** 최종 확정된 임원은 진한 색으로 표시함. 설립위원회에서 추천한 이들 이외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박정근(朴定根))과 총장 및 도지사가 이사로 추가 임명됨.

위의 표는 전북대학교 후원재단 설립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와 최종 확정된 이사 및 감사 명단이다. 향교재단 자체에 할당된 수는 전체 이사 17명 중 3명, 감사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주시 측 이사와 감사 추천도 향교재단 이사장 유직양과 명륜대학 학장 이우식(李愚軾)에게 위임되었다는

37) 같은 문서, '기부증서'. 이 중 후원재단 임원에 향교재단 인사를 일정 수(이사 3명, 감사 1명) 참여시키고, 후원재단 해산 시 향교재단이 기부한 재산은 향교재단에 환원해달라는 요구는 '전북대학교 후원재단 기부행위'에 반영되었다.

점을 고려하면, 전북향교재단은 이사 6명, 감사 2명을 참여시켰다고 볼 수 있다.[38] 재정적 측면에서도,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도 전북대학교 후원재단 구성에서는 전북향교재단의 주도권과 영향력이 돋보였던 것이다.

전북대학교와 그 후원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북향교재단의 주도성과 더불어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대학교 설립에 참여했던 각 지역 간의 협력과 경합이다. 전북대학교는 전주의 사립 명륜대학, 도립 이리농과대학, 군산대학관을 흡수하여 설립되었다. 전북대학교 후원재단 기본재산 구성에서 지가증권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국채는 전북대학교 설립에 참여한 세 지역 학교 관계자들이 해당 지역민으로부터 벌인 모금 운동의 결과물이었다.

〈표 6〉 전북대학교 후원재단 기본재산 중 지역별 국채 모금액 및 비율

보관자 명	국채 액면 금액
한국상공은행 전주지점	66,983,500 (32.3%)
후원재단 설립위원회 이리 지부장	100,000,000 (48.3%)
후원재단 설립위원회 군산 지부장	40,000,000 (19.3%)
계	206,983,500 (100%)

* 출처: 문교부 대학정책실 대학행정과, 1962, 〈재단법인전북대학교후원재단 설립허가 신청의 건〉, 《전북대학교후원재단서류철》,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1008)

그런데 세 지역 주체가 모여 국립대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의 이면에는 영향력의 확대와 주도권의 선점을 목표로 한 경합과 대립의 가능성이 상존했다. 특히 후원재단 임원 구성에서 이사를 각 지역에 몇 명씩 할당할 것인지를 두고 세 지역 학교 관계자들은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39] 이 과정에서

38) 같은 문서, '전북대학교 후원재단 설립위원회 회의록(1952년 2월 1일) 발췌' 참조.
39) 같은 문서, '전북대학교 후원재단 설립위원회 회의록(1952년 3월 7일)' 참조. 후원재단 임원 구성의 지역적 편중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향교재단 몫으로 할당된 이사 3명은 전주에 1명, 옥구에 1명, 익산에 1명씩 할당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향교재단 이사는 향교재단에 일임해야 한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전북대학교 후원재단 이사 정수는 문교부가 처음 규정했던 15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전주 지역의 이사가 6명이 되는 것에 대해 군산과 이리 지역 이사를 1명씩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40]

공식 학교사에서 지역 국립대학교 탄생기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과 자발적인 참여가 모이는 과정으로 묘사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기 국립대학교 후원재단 구성 과정은 이질적인 주체들이 모여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는 합심(合心)의 순간 못지않게 그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합과 긴장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전북대학교 후원재단 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은 그 전형적인 사례였다.

2) 전남대학교 후원재단: 전남향교재단의 '경제적 기여와 통제의 분리'

전남대학교 공식 학교사는 대학교 설립 과정을 전남 지역 관민의 협력과 열의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기억한다. 국무회의 가결 직후 전남지사를 회장으로 하는 전남대학교 설립기성회가 설립되고, 기성회는 3개 도립대학을 통합하며 대성대학 재산과 교수, 학생을 흡수하고, 귀속재산인 전남도시제사주식회사 주식을 기부받는 등 재원을 마련하여 부지와 교사(校舍)를 구입하고 대학교를 건설했다는 것이다.[41]

학교사는 전남대학교 후원재단의 구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서사를 반복한다. 이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개교 직후에는 이을식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거도적인 성격"을 지닌 '전남대학교 후원재단 설립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전남대학교 설립을 위해 전남도민이 각출한 성금과 향교재단에서 기부한 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후원재단"이 창립되었다.[42]

그러나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전남대학교 후원재단〉 문서는 국립대학교

40) 같은 문서, '전북대학교 후원재단 설립위원회 회의록(1952년 3월 7일)', 참조. 이사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하여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김두헌 고등교육국장은 당장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이사 증원이 고등교육국장 윗선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었음을 시사한다.

41) 전남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37면.

42) 같은 책, 58면.

신설을 위해 여러 주체가 협력하여 그 비용을 부담했던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남대학교 후원재단 설립 당시 기본재산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표 7〉 전남대학교 후원재단 설립 당시 기본재산 구성

종별	수량	금액	비고
지가증권 (특별보상)	정조 19,637석 1두	982,384,416원	본 지가증권 전액은 전남향교재단으로부터 기부받은 문교부 발행 지가증권임.
주권	26,637주	355,506,333원	도시제사공장으로부터 양도받은 주권임.
국채	9,584주	20,725,000원	일반인으로부터 기부받어 현재 기성회에서 보관중임.
계		1,358,615,749원	

* 출처: 문교부 대학정책실 대학행정과, 1962, 〈재단법인 전남대학교 후원재단 설립 허가 신청의 건〉, 《전남대학교후원재단》,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2314)

이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후원재단은 약 13억 가량의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기본재산에서 가장 거대한 비율을 점했던 것은 향교재단이 기부한 지가증권이었다. 그 가치는 9억 8천만원 가량으로, 이는 후원재단 기본재산의 72%를 차지했다. 재정적으로 볼 때 전남향교재단의 기여는 앞서 살핀 전북향교재단의 기여도(68%)보다도 높았다. 전남향교재단 역시 막대한 지가증권을 기부하며, "후원재단 이사 총수의 반수에 상당한 인원"을 향교재단 측 추천인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43]

그러나 전남대학교 후원재단의 최종 '기부행위'에서 향교재단 측 임원은 이사 15명 중 3명, 감사 3명 중 1명으로 축소되었다.[44] 최종 이사와 감사 명단에는 향교재단 측 추천인 이사 4명, 감사 1명이 들어갔다. 전남향교재단이 내세운 조건이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인선이었다. '경제적 기여와 통제의 분리'[45]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다.

---

43) 문교부 대학정책실 대학행정과, 1962, 〈재단법인 전남대학교 후원재단 설립 허가 신청의 건〉, 《전남대학교후원재단》,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2314), '기부서' 참조.

44) 이는 문교부가 제시한 '임원 배수 추천' 원칙이 적용된 결과였다. 예컨대 전남대학교 후원재단 설립위원회에서는 이사와 감사 정원(15명, 3명)의 배수인 30명, 6명을 추천했고, 그 중 문교부가 각각 15명, 3명을 낙점하여 후원재단 임원이 확정되었다.

〈표 8〉 전남대학교 후원재단 1, 2차 추천 및 최종 임원 명단

	향교재단		그 외	
	이사	감사	이사	감사
1차	고광표(高光表)	김선홍(金善洪)	김창선(金昌宣)	한규종(韓圭鍾)
	고광봉(高光鳳)		김홍삼(金洪三)	
	박철수(朴哲洙)		주형로(朱瀅魯)	
	권계수(權桂洙)		천독근(千篤根)	
	고광칠(高光七)		서정록(徐廷祿)	
	이진범(李鎭範)		이은상(李殷相)	
			박철웅(朴哲雄)	
2차	양회식(梁會湜)	정윤식(鄭潤植)	민병기(閔丙棋)	문상철(文相哲)
	정상호(鄭尙好)		김용진(金容鎭)	박경표(朴璟杓)
	이식래(李湜來)		김종순(金宗順)	정학철(鄭學徹)
	조국현(曺國鉉)		안용백(安龍伯)	
	김인기(金仁箕)		서우석(徐禹錫)	
	정용태(丁瑢泰)		송화식(宋和植)	
			이시복(李時馥)	
			최준기(崔駿基)	
			김용환(金容煥)	

* 출처: 문교부 대학정책실 대학행정과, 1962, 〈재단법인 전남대학교 후원재단 설립 허가 신청의 건〉, 《전남대학교후원재단》,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2314)

이는 앞서 살펴본 전북대학교 후원재단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더욱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재정적으로만 보면 전남향교재단이 후원재단 설립에 더욱 크게 기여했음에도, 정작 임원 구성에서는 향교재단 측 인사가 훨씬 덜 반영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전남대 후원재단의 사례는 재단에 대한 경제적 기여와 그 통제력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대학교와 후원재단 구성에 참여한 주체들의 행위와 실천이 만들어 낸 지역 특유의 동학에 주목해야 함을 보여준다.

전북향교재단과 비교할 때 전남향교재단은 전반적으로 전남대학교와 그 후원재단 참여에 확고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이끌려간 측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의 경우, 광주의대 학장이자 광주전시연합대학 책임자를

45) 김일환, 앞의 글, 40면.

맡았던 최상채(崔相彩) 학장을 중심으로 한 도립대학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 준비가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전남향교재단은 문교부로부터 사립 대성대학 설립 인가를 못 받고 있던 상황에서 고심하던 중 뒤늦게 전남대학교 설립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46]

전남향교재단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도권을 선점하지 못했던 데에는 전남대학교 설립 참여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입장을 확고하게 정하지 못했던 것이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1952년 5월 31일의 전남향교재단 평의원회 회의록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날 평의원회는 전남향교재단이 보유한 지가증권 중 문교재단 특별보상령에 의한 특별보상액을 전남대학교 후원재단에 기부하는 건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당시 전남향교재단 임원들은 중앙에 파견했던 평의원 2명과 이사 1명의 보고를 들었다. 회의록에는 파견원이 중앙의 문교부와 교섭한 내용과 지가증권 기부를 둘러싼 향교재단 임원들의 논의가 그대로 담겼다.[47]

이에 따르면, 전남향교재단 입장에서 대성대학을 전남대학교 문리과 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문교부가 대성대학 설립 인가를 불허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더 나아가 후원재단에 재산을 기부하라는 문교부의 방침은 전남향교재단이 "독자적으로 교육교화사업을 경영할 수 없고" 그렇기에 "문교재단 특별보상령의 은전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서 "국가의 방침에 순응"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48]

결과적으로 전남향교재단은 재석 의원 23명 중 20명의 찬성으로 지가증권을 전남대학교 후원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력

---

46) 전남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36-37면.

47) 문교부 대학정책실 대학행정과, 1962, 〈재단법인 전남대학교 후원재단 설립 허가 신청의 건〉, 《전남대학교후원재단》,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2314), '재단법인 전라남도향교재단 평의원회 회의록(1952년 5월 31일)'.

48) 같은 문서. 농지개혁에서 교육 및 교화시설을 경영하는 재단법인인 문교재단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일반 지주 농지에 비해 2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법률 제214호, 1951. 7. 18., 제정). 문교부에서 대성대학 설립 인가를 불허하는 상황에서 그 설립자인 전남향교재단은 특별보상법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이는 대성대학을 전남대학교에 통합하라는 문교부의 방침을 거스르기 힘들게 만들었다.

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초 대성대학을 발기한 책임자였던 조국현(曺國鉉) 이사[49]는 향교재단은 국회에서 입법 당시 문교재단으로 인정되었음으로 굳이 국립대학에 기부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특별보상액을 취할 권리를 지녔음을 강조했다. 또한 현 상황은 문교부 장관이 강제로 향교재단 재산을 몰수하려는 시도이며, 평의원회에서 결의하지만 않으면 기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심지어 그는 국립인 전남대학교는 국고금만으로 충분히 경영해야 하는데, 향교재단 이사들이 나서서 재산을 기부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배임적 행동이며, 이사진은 전부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50]

논전 끝에 전남향교재단은 '후원재단 이사 총수의 반수에 상당한 수를 무선거 이사로 충당케 하는 조건부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전남향교재단의 입장에서 전남대학교 설립 참여는 전쟁의 참화와 문교부의 사립대학 불인가 방침 등 온갖 제약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결정된 불가피한 선택에 가까웠다.[51]

3) 경북대학교 후원재단: 사립 대구대학의 이탈

전남대와 전북대 후원재단이 구성되는 과정은 향교재단의 경제적 기여와 통제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대조적이었으나, 경북에서는 앞선 두 지역에 비해 훨씬 더 예상치 못한 사태가 펼쳐졌다. 문교부의 '1도 1교 방침'에 따르면 경북대학교는 경북의 3개 국공립학교(국립대구사범학교, 국립대구농과대학,

49) 조국현은 제헌국회 의원으로 「농지개혁법」 논의 당시 문교재단 소유 농지를 모두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수정안을 발의한 한 바 있다. 김일환, 앞의 글, 166-167면.

50) 문교부 대학정책실 대학행정과, 1962, 〈재단법인 전남대학교 후원재단 설립 허가 신청의 건〉, 《전남대학교후원재단》,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2314), '재단법인 전라남도향교재단 평의원회 회의록(1952년 5월 31일)'.

51) 지가증권 기부를 둘러싸고 전북향교재단 내부에서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특히 지역 유림이 모인 평의원회에서는 향교재단 이사회가 지역 유림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이사들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정도로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향교재단의 논쟁은 기부의 정도를 둘러싼 것이었고, 갈등의 계선이 이사회와 평의원회 간에 그어진 데 반해, 전남향교재단에서는 기부 자체를 둘러싸고 이사들끼리 갈등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도립대구의과대학)와 사립 대구대학을 흡수할 예정이었으며, 후원재단은 사립 대구대학 재단을 토대로 설치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침을 따랐던 대구대학 재단 이사회가 결정을 번복하며, 국립대학교 편입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구대학의 이탈로 인해 문교부의 1도 1교 방침에는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후원재단 구성 역시 훨씬 늦어지게 되었다.

향교재단 대신 흡수 대상이 되었던 대구대학 재단은 해방 직후 지역 종합대학 설립 운동의 결과 탄생한 '민립형' 사립대학이었다. 사립 대구대학 재단 법인은 경북종합대학 설립 운동에 참여했던 유지 및 다액 기부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52] 한국전쟁 당시 대구대학은 군에 교사(校舍)를 접수당하고 대학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대구대학 재단은 문교부로부터 문화극장 관리권을 인수받고, 경북향교재단과 협력을 도모하며 재단을 보강하고 대학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매진했다.[53] 그러던 중 전쟁기에 경북 지역에서 국립대학교 설치 계획이 다시금 부상하자, 대구대학 재단 이사회는 1951년 2월 20일에 국립경북대학교로의 편입을 결정하고, 2월 25일에 문교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였다.[54]

그런데 이후 학교사에 따르면, 이는 몇몇 이사들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었다.[55] 1951년 12월 1일 재소집된 이사회는 의결을 번복하고 이를 바로 문교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했다. 1952년 2월 14일에는 대구대학 교수들이 이사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56] 그러나 문교부는 1952년 2

52) 11945년 10월경 경북에서는 각계 유지를 망라한 종합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었다. 지역민의 모금과 기부에 힘입어 1946년 11월에 신현돈 경북도지사 명의로 대구국립종합대학 설립 인가 신청서를 미군정 문교부에 제출했으나, 당시 서울에서의 국대안 반대운동의 여파와 대구 10월 인민 항쟁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종합대학 설립 시도는 단과대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사립 대구대학 설립으로 일단락되었다. 영남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75-79면.

53) 같은 책, 92면.

54) 같은 책, 94면.

55) 1947년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대구대학 재단 이사진은 이사장과 상무이사를 포함하여 11명이었다. 종합대학 편입을 결정한 이사회에는 7명의 이사가 참석했으며, 이 의결은 "재단기부행위 변경이라는 최중대사를 다액 기부자도 아닌 몇몇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라는 점에서 문제적이었다. 같은 책, 78면 및 94면.

56) 같은 책, 94-95면.

월 29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대학에 신입생 모집 중지를 통고하며 편입을 기정사실화했다. 1952년 5월 5일 재단 이사회가 책임지고 총퇴진한 후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는 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끈질긴 반대운동 끝에 1952년 10월 30일 대구대학은 결국 대구상과대학으로 다시 인가받으며, 경북대학교에서 이탈하는 것이 확실해졌다.[57]

〈표 9〉 경북대학교 후원재단 설립 당시 재산목록

		금액(단위: 환)
기본재산	토지	13,517,000
	건물	2,423,000
	소계	15,940,000
보통재산	인쇄기	6,775,000
	사무용 비품	127,000
	소계	6,902,000
계		22,842,000

* 출처: 문교부 대학정책실 대학행정과, 1962, 〈재단법인경북대학교후원재단 설립인가 신청의 건〉, 《재단법인경북대학후원재단서류철》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1005)

대구대학 재단이 이탈하면서 경북대학교 후원재단은 처음 계획보다 훨씬 더 늦은 시기에 다른 두 국립대학교 후원재단에 비해 빈약한 재원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58] 경북대학교 후원재단은 통합 대상이 된 학교 관계자 및 지역 유지를 핵심으로 한 경북대학교 건설위원회를 모체로 했다. 건설위원회 재산 일체를 비롯하여 '독지가의 희사금'과 지역민의 모금에 힘입은 기부금을 바탕으로 문교부 장관에게 후원재단 인가 신청을 하여 1956년 7월 23일

57) 같은 책, 95-97면.

58) 앞서 살핀 1952년 기준 두 국립대학교 후원재단의 기본재산(전북대 후원재단 1,596,102,562원, 전남대 후원재단 1,358,615,749원)을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서울 도매물가지수'(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45-1960,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2025.8.16. 검색)를 기준으로 1956년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면 각각 약 6,256만 환, 5,325만 환에 해당한다. 1956년 경북대 후원재단 기본재산에 비해 각각 2.7배, 2.3배 가량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비교는 대략적인 계산에 기반한 것이며, 더욱 엄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도매물가지수 등을 고려해야 함을 밝혀둔다. 각기 다른 시점의 기본재산 비교에 관해 조언을 주신 허원준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59]

또한 가까스로 설립된 경북대 후원재단에는 이사 9명, 감사 2명이 임명되었는데 이는 기부행위에 규정된 정원(이사 15명, 감사 3명)을 채우지 못한 인사였다.[60] 후원재단에 대한 임원 선정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 끝에 이사 정수를 늘리기까지 했던 전북대학교 후원재단의 경우와 대조적인 상황이었다.

경북 지역 국립대학교 설립 과정에서 사립 대구대학의 이탈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앞서 본 전남향교재단 내부에서 제시된 반대의견과 마찬가지로 대구대학 재단 측으로서는 "문교부 장관이 강제적으로 본 재단의 재산을 몰수하려 한 계획"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61] 특히 대구대학 재단은 전북이나 전남처럼 애초부터 관의 통제와 감독하에 설치된 향교재단이 아닌 민간 재단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동기가 강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면의 동기와는 별개로 대구대학 측은 국공립과는 구별되는 사학(私學)의 존립 필요성을 핵심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이후 학교사는 이 시기 대구대학 재단 이사회가 국대 편입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이사회가 국대 편입을 반대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온 도민들의 정성으로 건립된 민립대학으로서의 대구대학이 국립대학에 편입하는 것은 원래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과, 사학의 교육적·문화적 역할에 비추어 사학은 사학으로서 존립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다.[62]

재단 이사회는 대구대학이 국립대학교에 흡수되지 않고 사립으로 남아야 하는 명분을 사학이 지닌 민립으로서의 정체성에서 찾았다. 애초에 대구대학

59) 경북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87면.
60) 문교부 대학정책실 대학행정과, 1962, 〈재단법인경북대학교후원재단 설립인가 신청의 건〉, 《재단법인경북대학후원재단서류철》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1005), '설립 당시 이사 및 감사 명부'.
61) 문교부 대학정책실 대학행정과, 1962, 〈재단법인 전남대학교 후원재단 설립 허가 신청의 건〉, 《전남대학교후원재단》,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2314), '재단법인 전라남도향교재단 평의원회 회의록(1952년 5월 31일)' 중 조국현 이사 발언.
62) 영남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94면.

은 도민의 협조에서 건립된 민립대학이며, 사학은 관학 혹은 '국립'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민립 교육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구대학 교수들로부터는 상당한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63]

그러나 대구대학의 편입 반대 결정은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전면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다. 특히 이사진의 결정 번복에 대해 교수들이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호응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대구대학생 130여 명은 오히려 이사진이 당초 '계약'을 위반한 것을 비판하며 국립대학교 편입을 문교당국에 진정했다.[64] 이들의 반발은 징집 연기 문제를 위시한 학생들의 독자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을 공산이 크다. 대구대학은 신설될 경북대학교에 편입될 것을 전제로 이미 해체되었다는 문교부의 통보로 인해, 학생들은 징집 연기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65]

하지만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민립으로서 사학'이라는 당위가 이 시기 점차 동요하고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부실 대학의 난립'과 '학원(學園)의 영리화' 문제는 이미 정부 수립 직후부터 서로 긴밀히 엮여 지적되고 있었다.[66] 사학 재단의 정당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이미 이 무렵에는 공공성과 사사성의 문제를 관통하는 '사립대학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대구대학에서는 문교부의 처사를 '사학에 대한 일방적인 통폐합'으로 규정하며 저항하는 목소리와 오히려 이사회의 번복을 '계약 위반'이라 지적하며 종합대학 편입을 요구하는 주장이 교차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결정 번복을 낳은 대구대학 재단 이사

63) 같은 책, 94-95면.
64) 「이사진 위배는 한심, 종대 편입 지지 대구대학생이 진정」, 『경향신문』, 1952년 3월 31일, 2면. 학생들이 이사진의 번복 결정을 '계약 위반'으로 이해했던 것은 당시 대구대학 재단이 1950년 11월 22일에 문교부로부터 문화극장 관리권을 인수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문화극장 관리권 인수는 대구대학이 국립대학교 설립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영남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92-93면.
65) 같은 책, 95-97면.
66) 「학원의 영리화」, 『동아일보』, 1948년 10월 19일, 1면; 「공금횡령? 대구대학장 돌연 수감」, 『평화신문』, 1952년 3월 24일, 2면.

회의 운영 구조이다. 앞선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문교부의 '1도 1교 방침'은 지역 주체들과의 사전 교섭과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었다. 문교부로서는 이미 대구대학의 경북대학교 편입 의사를 확인한 후, 〈설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이었기에 대구대학의 입장 번복을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구대학 재단의 번복과 이탈은 '민립' 대구대학 재단의 의사 결정 구조와 관련지어 이해할 여지가 있다.

해방 이후 대구대학이 설립되는 과정은 지역 엘리트의 주도하에 지역민의 모금이 더해지는, '위로부터'와 '아래로부터'의 동학이 결합한 민립 지향적 형태를 보였다. 그럼에도 해방 이전 민립형 사립전문학교에서 공동 출연자들이 평의원회를 통해 재단 운영에서 이사회와 권한을 분점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해방 이후 구성된 대구대학 재단의 운영 구조는 소수의 이사회를 중심으로 수렴되었다.[67] 즉 처음 국립대학교로의 편입 결정이 몇몇 이사에 의해 내려진 것이었다는 점에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든 결정 번복은 '민립' 대구대학 재단의 의사 결정 구조가 소수의 이사진을 중심으로 획일화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립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다른 수많은 구성원과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구조 속에서 국립대학교 참여 여부를 결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대구대학의 민립으로서의 성격에 의문을 드리웠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대구대학의 지난했던 국대 편입 반대운동은 '민립'으로 설립된 대구대학이 소수 이사진의 결정으로 운영되었던 구조에 대한 반발이자, 민립으로서 사학의 성격을 재확인하고자 한 움직임이기도 했다.

4. 맺음말

한국전쟁기 각 지역에 국립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했던 문교부는 기존 사립대학 재단을 후원재단으로 포섭하는 전략을 취했다. 국립대학교 후원재단은

67) 김일환, 앞의 글, 150-155면.

고등교육 분야에서 민간의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려 했던 전략이 비단 사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렇기에 국가(문교부)가 설립자가 되는 국립대학교에서 국가의 영향력이 제약되거나 애초의 의도와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전북대·전남대·경북대는 문교부의 1도 1교 방침에 의해 일괄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그 구체적인 과정과 결과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1도 1교 방침의 핵심이 물적 토대가 상대적으로 허약했던 각지의 대학을 국립대학교로 정리하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 학교의 설립자인 향교재단을 비롯한 사립대학 재단을 후원재단의 형태로 흡수하면서 각 사립대학을 설립했던 행위자들을 그대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 각 국립대학교와 그 후원재단이 설립되는 양상은 지역 관료와 유지, 향교재단을 비롯한 사립대학 재단 이사진 등의 행위와 결정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각 지역의 고유한 동학에 좌우되었다. 그렇기에 국립대학교가 초창기에 설립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교부의 의도 못지않게 각 지역의 행위자들과 그들이 보인 전략과 실천에 주목해야 한다. 국립대학교 후원재단은 바로 그러한 전략과 실천이 교차·경합하는 장이었다.

후원재단 설립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남는 질문은 결국 각 후원재단이 국립대학교와 맺은 관계에 관한 것이다. 후원재단은 이후 국립대학교 운영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인사와 학사 운영에는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가? 무엇보다 민간 자원이 동원된 가운데 탄생한 지역 국립대학교의 초기 역사가 어느 순간 망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원재단의 탄생 못지않게 그것이 일정한 변화를 거쳐 결국은 해산되고 소거되는 과정이야말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제기한 질문들은 종적으로는 한국 국공립대학의 역사적 경로를 설명하는 단초이자, 횡적으로는 국공립과 사립을 아울러 본 한국 고등교육 체제를 조망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겨진 질문들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검토한 국립대학교 후원재단의 설립 과정을 토대로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경향신문』, 『동아일보』, 『평화신문』

문교부 대학정책실 대학행정과, 1962, 〈재단법인경북대학교후원재단 설립인가 신청의 건〉, 《재단법인경북대학후원재단서류철》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1005)
문교부 대학정책실 대학행정과, 1962, 〈재단법인 전남대학교 후원재단 설립 허가 신청의 건〉, 《전남대학교후원재단》,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2314)
문교부 대학정책실 대학행정과, 1962, 〈재단법인전북대학교후원재단 설립허가 신청의 건〉, 《전북대학교후원재단서류철》,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231008)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51, 〈국무회의 부의사항(경북,전북,전남 국립대학교(종합대학교) 설치에 관한 건)〉, 《국무회의상정안건철》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4187)

경북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경북대학교 50년사: 1946-1996』, 경북대학교출판부, 1996.
문교부, 『대한민국교육개황』, 1949.
문교부, 『단기 4290년도 문교행정통계일람』, 1957.
영남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영남대학교 50년사: 1947-1997』, 영남대, 1996.
전남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전남대학교 50년사: 1952-2002』, 전남대, 2002.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45년사: 1947-1992』, 전북대학교, 1992.
죽헌이을식선생 전기발간위원회, 『청빈의 외길』, 고려서적, 1999.
한국교육10년사간행회, 『한국교육10년사』, 풍문사, 1960.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법률 제214호, 1951. 7. 18., 제정)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군정법령 제194호, 1948. 5. 17., 제정)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45-1960 '서울 도매물가지수',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2025.8.16. 검색)

강명숙, 『미군정기 고등교육 연구』,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김기석, 『한국 고등교육 연구』, 교육과학사, 2008.
김일환, 『한국 사립대학체제의 형성과 재단법인의 정치』,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김정인, 『대학과 권력』, 휴머니스트, 2018.
김종철, 『한국고등교육연구』, 배영사, 1979.
박선영·김회용, 「한국전쟁기 대학상황의 이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
박환보, 「한국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상 분석」, 서울대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손인수, 「한국동란 중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29,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1995.
연정은, 「전시연합대학과 학원통제」, 『사림』 24, 수선사학회, 2005.
윤해동, 「네트워크로서의 대학, 전시연합대학」, 『사회와 역사』 142, 한국사회사학회, 2024.
이종길, 「해방 후 부산지역의 대학설립과 동아대학 창학 및 법학교육의 전개」, 『동아법학』 85,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이지원, 「미군정기 한국 사립대학 설립의 사회적 조건들 : 국가 정책과 자원 동원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장순순, 「해방 이후 향교재산관리와 지방 국립종합대학교의 설립-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84,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5.

【Abstract】

the ‘One National University per Province’ Policy and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s during the Korean War

Lee, Ji-wan*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Chonnam, an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ies under the ‘One National University per Province’ Policy during the Korean War, focusing on the financial aspect. In financial terms, the Ministry of Education established these institutions by mobilizing private resources while restricting public expenditure. As a result, provincial colleges and private colleges were consolidated into a national university in each province. In this process, the Ministry sought to incorporate private college foundations into newly created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s in order to secure a stable financial base.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each National University and its foundation depended on the unique regional dynamics shaped by the actions and decisions of various local actors such as bureaucrats, local elites, Confucian scholars of *Hyanggyo* foundations and the board members of private college foundations.

Keywords: One National University per Province Policy,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artime Union University

접수일: 2025.06.30. ‖ 심사일: 2025.08.06. ‖ 게재확정일: 2025.08.06.

* Ph.D. Student, Department of History, Sungkyunkwan Univ.